

“탄핵·국회 주도 총리 선출·과도 내각...국정공백 최소화”



“대통령 퇴진”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비상사국 정치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연합뉴스

野 대선 주자들 회동...국회·3당에 요청

“박대통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정운영 손떼라”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또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주문하는 등 8개 항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사국 정치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합의했다.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력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

한 배반 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통틀어 참회하고 핵심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야 3당 공조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당초 이날 모임은 탄핵 추진과 총리 선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대선주자 간의 견해가 달라 정국공조를 다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 직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기밀유출 공모’ 혐의가 공식화하면서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이다.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2시간으로 길어진 데에는 탄핵에 대한 이견 및 세부 문구조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다

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이날 회의에서 탄핵 절차 돌입이나 총리 선출 문제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즉각 퇴진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도, 정치권도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정·안철수·이재명·천정배 등은 탄핵 추진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보수층을 너무 자극하는 문구는 삼가라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합의는 이번주에 진행될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경필·김용태 주초 새누리 탈당

공식 선언할 듯...비주류 “대통령 탄핵·출당”

새누리당 분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비주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3선인 김용태 의원이 탈당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주 초 공식 선언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야당 주요 인사의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상당수 비주류 인사들도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연쇄 탈당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현재로서는 보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을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지사 측 핵심 관계자도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다고 봐도 된다”면서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지면 곧 탈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에서 회동하고 ‘동반 탈당’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찌감치 박 대통령에 대해 ‘하야에 준하는 2선 후퇴’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비

주류 하대경 의원도 탈당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함께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들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사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부겸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

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현역 의원은 정병국 김재경 나경원 의원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조경태 영동열 송석준 의원 등 3명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 비주류마저 박 대통령의 탄핵과 출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박 대통령과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당이 하나가 돼 하루빨리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자리를 찾아 당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당직에서 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퇴임 후·당선인 신분...현직은 최초

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역대 대통령의 검찰조사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러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우부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이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고, 이후 검찰이 박연차 전 대광산업 회장과 대통령 사이의 혐의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사건’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추가조사

논란이 불거진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었다.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로 3시간 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국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받고 하루 만에 답변서를 보내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응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한 차례 더 소환된 뒤 구속됐다.

한 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체포됐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추미애 잇단 ‘舌禍’

영수회담 취소 이어 ‘계엄령’ 발언 홍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잇따른 ‘헛발질’로 정치권의 눈총을 사고 있다.

대표 취임 직후 전두환 대통령 예방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추 대표는 지난주에는 민주당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 내외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하는 파동을 겪은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계엄령’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가

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 재계에 돌입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국면 돌파를 위해 계엄령 선포 등 극약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지도자가 하기에선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홈페이지 ‘오보·괴담’ 대응코너 신설 해명

安 “공적체계 개인 이용 안돼”

청와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신설하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청와대에는 관련 자료를 수습하고 제자리를 찾아 당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당직에서 사퇴했다.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주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우리나라의 공적인 체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